

# “금강산 관광 재개, 안전 등 보장 돼야”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일주일 정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통일부가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할 만한 상황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강산 관광 재개에 앞서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과 재산권 보장 등에 대해 남북 간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9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평양선언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조건이 마련된 데 따라 우선 정상화하기로 했다”며 “관련국과 협의하는 가운데, 구체적인 것들은 남북 간에도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재 상황”이라면서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서 여러

통일부 “관련국들 협의해야...남북 간 협의 필요해”

“2차 북미정상회담 협상과정 고려해 추진방향 결정”

가지 방안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그런 것들은 상황이 되면 판단해볼 수 있겠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게 없다”고 말했다.

당국자는 “다만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신변안전 보장이나 재산권 보장을 포함해서 남북 간 구체적인 협의가 되어야 할 거 같다”며 “지금 벌어지는 북미 협상과정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해서 향후 추진방향을 정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금강산 관광은 북미 2차 정상회담

을 계기로 변화 가능성이 접착되는 남북 협력사업 중 하나다. 남북은 지난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조건이 마련되면 우선 정상화하기로 했다.

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신년사에서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외교부에서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진전에 따라 금강산 관광이 이르면 올 상반기 안에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거론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인 18일 7

대 종단 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남북 경제협력의 시작되면 가장 먼저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 금강산 관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가 현물 납부 방식의 금강산 관광 재개를 북측에 제안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현재 유엔 안보리 제재나 북한 제재, 우리 정부의 5·24 제재는 현금 지불이 불가능하게 돼 있다”며 “안보리 제재를 피하기는 쉬운 현물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렇게 유추한다”고 밝혔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국회의장-여야5당 원내대표 회동 문희상 국회의장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영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등 여야 5당 원내대표단이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있다.

## 박지원 “지만원이 DJ편? 도운 건 사실이지만 DJ가 멀리해”

“지씨가 장관 등 직책 보장·제의 받은 사실 없어”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19일 ‘극우 논객’ 지만원씨가 과거 군사전문가로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인재를 영입된 바 있다는 보도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지씨가 김 대통령 후보를 도운 것은 사실”이라면서 “지씨의 언행을 살펴본 김 대통령은 흡족하게 생각하지 않고 약간 멀리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제가 (지씨를) 많이 만났다. 당시 박태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친구여서 박 장관이 시스템 공학 문제에 대한 용역을 줬다는 말은 들었지만 확인은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떻게 봤든 지씨가 무슨 장관을 어떤 직책을 보장받거나 제의받은 사실은 없다는 것을 밝힌다. 오해없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2월 임시국회 정상화도 촉구했다. 그는 “2월 임시국회는 국회법에 규정된 의무사항이다. 자동으로 열려야 하는데 (한국당이) 합당하지 않은 조건을 내세워 응하지 않고 있어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유치원법, 소상공인법 등 민생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등 권력 관련 현안 탄력근로제 등 노동 관련 현안, 선거법 등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내년 선거에 대비할 수 있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5·18구속부상자회 대구·경북지부, 대구민중과함께 등 66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18일 오후 대구 북구 산격역 엑스코 앞에서 ‘5·18명인 김순례, 김진태, 이종명 의원 제명, 직폐정당 자유한국당 해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자유한국당 근간마저 흔들리나 영남·60대 지지율도 큰 폭 하락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5·18 24.5%로 다시 하락했다(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5·18 명인 논란이 지지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천 회가 벌써 열흘 되긴 했지만 그 논란을 확장시킨 게 당 윤리위원회의 이른바 ‘꼼수 징계’라며

24.5%로 다시 하락했다(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5·18 명인 논란이 지지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천 회가 벌써 열흘 되긴 했지만 그 논란을 확장시킨 게 당 윤리위원회의 이른바 ‘꼼수 징계’라며

지지율 TK서 13.6%나 급락해 PK서 6.1%·60대이상 8.4%↓

리얼미터 “5·18 명인” 영향

“윤리위 ‘꼼수 징계’ 사태 확장

지지율 TK서 13.6%나 급락해 PK서 6.1%·60대이상 8.4%↓

리얼미터 “5·18 명인” 영향

“윤리위 ‘꼼수 징계’ 사태 확장

“이종명 의원만 제명하고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유보한 것이” 오히려 논란을 더 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뒷발에서의 지지율 하락에 따른 우려는 한국당 내부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5·18 왜곡발언 사태를 비롯해 최근 진행 중인 전당대회 후보자 토론회 양상을 지적하며 우경화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했다.

장 의원은 “지역구를 돌아다니니 여기저기서 ‘도대체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냐’며 안타까워하는 목소리 일색이었다. 보수의 중심인 한국당의 ‘급진 우경화’는 보수의 몰락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종명 의원만 제명하고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유보한 것이” 오히려 논란을 더 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뒷발에서의 지지율 하락에 따른 우려는 한국당 내부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5·18 왜곡발언 사태를 비롯해 최근 진행 중인 전당대회 후보자 토론회 양상을 지적하며 우경화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했다.

장 의원은 “지역구를 돌아다니니 여기저기서 ‘도대체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냐’며 안타까워하는 목소리 일색이었다. 보수의 중심인 한국당의 ‘급진 우경화’는 보수의 몰락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062-960-6980  
광산구 사일로 340번안길 5

광산구 Together 광산구